

## IMF체제하의 수출정책방향\*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수출증대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우리의 수출실적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수요의 하락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수출감소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안정과 한계를 여러모로 살펴 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의 수출신장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정부는 강력한 정책지원으로 수출성장을 유도하였고 기업은 정부의 보호아래 품질경쟁력 향상을 외면한 채 양적인 팽창에 더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의 수출상품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지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후발개도국들에 뒤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경제가 IMF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은 물론 기업활동 등 경제 전반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은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형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의 수출지원정책은 과거의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리 상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하고 무역관련 정책과 제도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기업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정부의 새로운 수출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과 수출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1. 서 론

1997년 7월 태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되어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륙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당사국들에게 경제구조조정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가져다주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 금융부문을 비롯하여 기업, 노동 및 공공부문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조조정의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IMF와의 협의 하에 대부분 거시경제정책적 차원에서 대응해 왔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 수출증대를 강조해 왔다. 즉, 수출증대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고갈된 외환보유고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충하고 대외신인도 및 생산시설의 가동률 제고와 악화되는 실업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 본고는 1998년 11월에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ITBI Forum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본고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서울대 국제지역원의 박장호 조교에게 감사를 표한다.

수출증대 이외에, 금융위기 해소와 구조조정 촉진에 필요한 자본유입의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 또는 직접투자를 통한 외자유치를 또 하나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개방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주식 및 채권시장 전면개방', '외국인의 모든 M&A 전면 허용',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치'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노력에 따른 결과, 1998년 중 총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상 최대규모인 89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난 1962년부터 1997년까지의 총 외국인투자 유치금액의 36%에 해당된다.

1998년 초 원화가치 하락에 힘입어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수출은 아시아지역의 경제침체,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 계속되는 금융경색과 수출입금융 부진, 일본 엔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1998년 5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 후 지속되던 수출감소세는 11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1998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2.2%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사상 최대 규모인 4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재 및 원자재 등의 수입급감에서 온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안정과 한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금년에 예측되는 설비투자 증가와 이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1)</sup>

IMF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상품수출뿐 아니라 상품수입, 서비스의 수출입,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의 중요성, 최근 수출동향과 수출부진 원인, 수출촉진방안 등으로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 II. 수출의 중요성

### 1.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정부중심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은 수출직접보조금(direct export subsidy)과 수출입연계제도(export-import link)에 크게 의존하였고 수출지원제도는 수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율제도 정비와 함께 체계화되어 1960년대 중반에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가동된 수출지원정책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금융, 수출산업 운전자금에 대한 우대금융 등과 같은 금융상의 지원정책과 각종 관세면제를 토대로 하는 세계상의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었다. 1962년 정부는 처음으로 수출목표액(export targeting)을 설정하였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월별 수출확대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수출증대 정책을 펴 나갔다.

1) 한국개발연구원(1998b)

197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중화학공업의 수출증대에 집중적인 노력을 펼쳤다. 즉 정부는 관련 기업에 대하여 대폭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수출지원제도 또한 특정 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직접지원형태의 영업세 및 소비세 감면제도를 폐지하였고 대신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sup>2)</sup>를 통해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영업 손비인정 등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관세감면제도 또한 사후적인 관세환급제도로 전환시켜 국제규범에 부합시켰다.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는 1980년대 들어와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 나타난 일시적 무역수지흑자와 그로 인한 통상마찰 등 대대의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출지원제도는 조세 및 관세지원에서 금융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표 1> 한국 수출입의 규모변화: 1962-1998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연도	1962	1967	1977	1987	1997	1998	연평균 성장률(%)				
							67~77	77~87	87~98	67~98	62~98
수출(A)	55	320	10,406	47,281	136,164	133,223	41.6	16.3	9.9	21.5	24.2
수입(B)	422	996	10,811	41,020	144,616	93,344	26.9	14.3	7.8	15.8	16.2
무역수지	-367	-676	-405	261	-8,425	39,879	-	-	-	-	-
A/B	13.0	321	93.4	115.3	94.2	142.7	-	-	-	-	-
GNP	23	43	368	1,289	4,804	2,908*	23.9	13.4	7.7	14.6*	14.4*
A/GNP	2.4	7.4	28.3	36.7	27.0	45.8*	-	-	-	-	-
B/GNP	18.3	23.2	29.4	31.8	31.3	32.1*	-	-	-	-	-
1인당 수출	2.1	10.6	276.0	1,136.0	2,848.4	2,787.1*	38.5	15.2	8.5*	19.7*	22.1*
1인당 수입	16.1	33.1	297.0	985.6	3,301.3	1,952.8*	24.5	12.7	6.4*	14.1*	14.3*

구분 \ 연도	1962	1967	1977	1987	1997	1998	연평균 성장률(%)				
							67~77	77~87	87~98	67~98	62~98
세계수출	1,289	2,001	10,771	23,927	52,483	52,222*	18.3	8.3	7.4*	11.1*	10.8*
세계수입	1,373	2,132	11,134	24,748	52,406	51,855*	18.0	8.3	7.0*	10.8*	10.6*
A/세계수출	0.04	0.16	0.97	1.98	2.59	2.55*	-	-	-	-	-
B/세계수입	0.31	0.47	0.97	1.66	2.76	1.80*	-	-	-	-	-

註: \*는 1997년 기준 수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각호)와 KOTIS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각호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8

2)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영문 명칭의 약자는 예전과 같이 KOTRA로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고임금, 고물가, 원화가치 상승, 노사분규 등에 따른 국제경쟁력상실로 점차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 폭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누적되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즉,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정부의 무역정책과 각종 제도운영에 있어서의 개량권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잠시 있었던 무역수지 흑자는 1990년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섰으며, 1996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는 외환보유고의 고갈과 국제신인도의 하락 등에 한 몫을 하였으며 결국 1997년 말에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6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식 회원국이 된 한국은 무역정책과 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IMF체제하에서 정부의 수출정책은 수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수출지원 쪽으로 회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수출정책은 WTO의 규범과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추세를 감안하여 수출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에 그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2. 한국수출의 구조적 변천

우리 수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에 힘입어 1960년대 중반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경제성장보다 빠르게 신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졌다. 연간 총수출액은 1962년 5,500백만 달러에서 1967년 3억2천만 달러로, 이후 10년만인 1977년에는 10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증가는 세계수출의 평균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표 1> 참조). 1997년 한국은 총 1,362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세계수출순위 12위(수입순위 11위) 국가가 되었다.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2년 2.4%에서 1967년에 7.4%로 증가했고 1987년에는 36.7%로 크게 확대되었다. IMF 경제위기여파로 1998년에는 수출이 2.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빠른 수출증가와 함께 수출품목의 구성도 바뀌었다. 1950년대에 총수출의 73%를 차지하던 농산물, 광물은 1964년의 경우 23%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반해 제조업 수출 비중은 25%에서 72%로 증가했다. 수출상품구성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큰 경제일수록 이러한 상관관계는 더욱 더 밀접할 수밖에 없다. 1970년대에 들어와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추구한 것은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의류, 신발, 합판, 가발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동시에 국내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걸쳐면서 한국에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가전제품 등의 대규모 생산체제가 갖추어졌고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통신장비 등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표 2> 참조). 하지만 이러한 수출품목의 고도화와 더불어 한국의 수출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산

업고도화와 함께 수출이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이다. 수출금액으로 상위 30대 품목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1997년에 약 69%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 중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3분의 1정도 (29.7%)를 점하였다.

<표 2> 수출구조 1970, 1980, 1990, 1998

1970		1980		1990		1998	
수출품목	%	수출품목	%	수출품목	%	수출품목	%
섬유류	40.8	섬유류	28.8	전기전자	27.5	전기전자	22.7
합판	11.0	전기전자	11.4	섬유류	22.6	섬유류	12.9
가발	10.8	철강제품	9.0	신발	6.6	자동차	7.0
철광석	5.9	신발	5.2	철강제품	6.5	철강제품	6.5
전기전자	3.5	선박	3.5	선박	4.3	금	5.6
과자류	2.3	합성수지제품	3.3	화학제품	3.6	석유화학	5.1
신발	2.1	금속제품	2.3	자동차	3.0	선박	5.1
담배, 구리	1.6	합판	2.0	일반기계	2.7	일반기계	4.0
철강제품	1.5	원양어류	2.0	어업제품	2.3	플라스틱제품	1.6
금속제품	1.5	전기기계	1.9	플라스틱제품	2.0	타이어 및 튜브	1.2
합 계	81.1	합 계	69.3	합 계	81.1	합 계	72.3

수출품목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수출대상국의 구성도 크게 변화되어 왔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수출신장은 수출대상국의 확산과 시장다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시장에 대한 수출·수입 편중현상이 크게 해소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수출상대국은 1962년 33개국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개도국 및 전사회주의국가 등으로의 수출시장다변화 노력으로 현재 200개국을 넘어섰다. 수출시장의 지역구조면에서 특징적인 상황을 요약하면, 첫째, 1960~70년대에 70~80%를 차지하였던 미국과 일본시장에의 집중도는 크게 하락하여 1997년에는 각각 15.9%와 10.8%로 그 합이 27%에도 못 미쳤다. 1980년대에 74~75%에 달하였던 상위 10대 수출상대국의 비중도 그 동안 꾸준히 하락하여 1997년의 경우 65.2%를 기록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시장 비중의 하락과 함께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비중도 12%선에서 머물고 있어 선진국시장(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포함)에 대한 수출비중은 1960년대의 80% 수준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50%이하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20%에 불과하던 개도국시장의 비중이 이제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동아시아 개도국 시장의 비중이 1970년의 7.6%에서 1995년에는 33.2%로 상승하였다.

우리의 무역은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무역수지면에서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쌍무적 무역수지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다. 즉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의 무역에서는 대규모 적자를 보이는 반면,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남미 국가 등 개도국과의 무역에서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수출상품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선진국시장에서 밀려난 반면 개도국 시장에 대한 투자 및 수출 확대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패턴은 장기적으로 산업기술발전과 균형된 통상관계 정립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세계의 핵심시장이라 할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우리의 수출상품이 경쟁력을 잃고 오히려 개도국시장에서 그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무역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3. 한국의 수출경쟁력 평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분석한 1998년 맥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산업화 초기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그 후에도 비교적 느리게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특히 일인당 총요소투입(total factor input per capita)의 경우 1995년 수치를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 거의 같은 수준(한국: 98, 미국: 100)을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거의 절반 수준(한국: 51, 미국: 100)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하면 한국 수출품의 고급화지수<sup>4)</sup>는 1996년의 82.4(기준지수 1995년: 100)에서 1997년에는 71.3으로 11%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이렇듯 한국은 수출상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고 외부적 경제여건, 특히 엔화가치변동에 민감한 물량위주의 수출을 해왔다 (<표 3> 참조).<sup>5)</sup>

이러한 저비용 물량위주 수출구조의 불안정성은 작년의 수출패턴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들은 엔화의 약세로 저조한 수출실적을 보였고, 신발, 섬유제품 등 경공업제품과 가정용 전자 등의 산업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인 통화가치 약세로 수출이 부진하게 되는 현상을 보였다. 1997년에 발간된 Booz, Allen & Hamilton사의 『한국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수출 품목 중 저가품은 중국과 같은 저비용 구조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반면 중화학공업 제품은 첨단기술력을 갖춘 일본과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된바 있다.<sup>6)</sup> 이는 아시아경제권 내 분업구조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경

3) McKinsey Global Institute(1998) 참조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참조. 수출품의 고급화지수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해지는 것이다.

5) KIET의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환율의 10%절하는 한국의 수출을 2.8%증가시키는 반면, 엔/달러환율의 경우는 6.2%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동반절하시 엔화절하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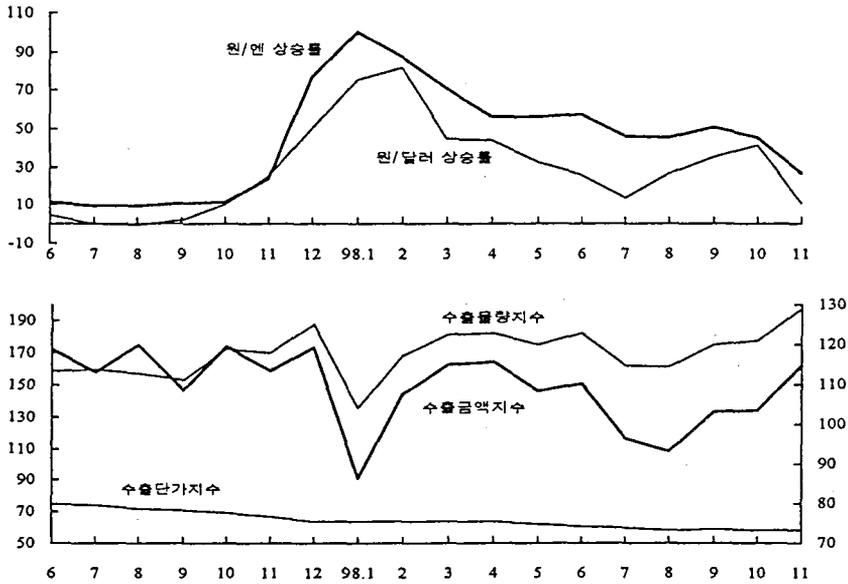
6) 매일경제신문사(1997) 참조

쟁력에서 뒤지고 있어 우리의 수출품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산업의 미래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으로 중국이 우리의 경쟁우위분야를 잠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sup>7)</sup> 한국개발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2000년대 중반정도까지가 우리 경제의 선진국진입 가능성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표 3> 환율변동, 수출단가, 수출물량 및 수출금액

	원/달러 상승률(%)	원/엔 상승률(%)	수출단가지수	수출물량지수	수출금액지수
1997.6	11.5	4.9	75.0	158.5	118.9
7	9.6	0.4	74.3	159.9	113.3
8	9.7	-0.7	71.9	157.3	119.9
9	10.7	2.2	70.9	153.4	108.8
10	11.4	10.1	69.4	172.4	119.6
11	23.8	25.1	66.8	170.0	113.6
12	76.9	49.7	63.5	187.8	119.3
1998.1	100.8	75.5	63.7	135.6	86.4
2	87.2	81.8	64.0	168.3	107.7
3	71.2	44.5	63.5	181.3	115.2
4	55.8	43.9	63.6	181.9	115.7
5	56.3	32.8	62.0	175.0	108.5
6	57.1	25.6	60.4	182.5	110.2
7	46.1	13.9	59.3	162.3	96.3
8	45.5	26.1	57.8	161.2	93.2
9	50.7	35.4	58.9	175.3	103.3
10	45.0	40.9	58.2	177.8	103.5
11	26.2	10.9	58.2	197.2	114.8

7) 한국개발연구원(1998a)



자료: 한국은행

### III. 1998년 수출동향과 수출부진 원인

#### 1. 전반적인 수출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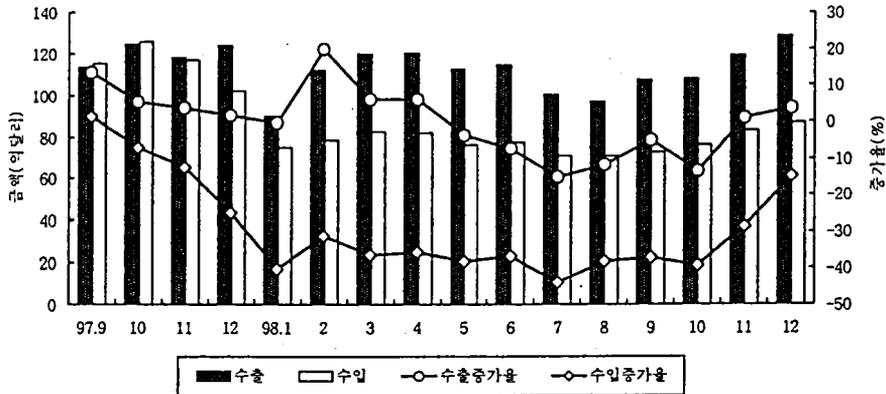
1998년 한국의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1,332억 달러, 수입은 35.4% 감소한 93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3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로서 과거 1986~89년 사이의 무역흑자 누계치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수출실적을 월별로 살펴보면 수출증가세를 나타낸 2~4월과<sup>8)</sup> 감소세로 반전된 5~10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11월과 12월로 구분된다.

한편 수입은 수출의 증감에 관계없이 1997년 9월을 제외하고 97년 7월 이후 월평균 30~44%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가 커지기 시작하여 1998년 7월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3.9%나 하락하였다. 특히, 국내경기침체의 지속과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영향으로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중심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는 곧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다. 그 결과 1998년 한국은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무역

8) 98년 1/4분기중 수출증가율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한 금수출(3월말 현재 18억 달러)을 제외할 경우 전년동기대비 2.7%(금액으로 8억 달러 내외)에 불과하다.

흑자의 주요 원인은 수출증가 때문이 아닌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 격감에 있다. 이는 또한 한국 무역의 구조적 불안정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금융위기 이후 월별 수출입



자료: 한국은행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의 수입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쟁국들의 수출실적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개도국들과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1998년 2/4분기 이후 수출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수출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6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61.4% 감소하였으며, 수출감소가 가장 작은 국가는 중국으로 5월에 1.7% 감소만을 나타냈다. 일본은 1998년 2월 이후 지속적인 수출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과 태국은 각각 4월 이후 감소를 나타냈다.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등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수출감소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여타국가들의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국가들이 처한 대내여건이 1998년 5월 이후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국가들의 가장 큰 수출대상지역인 미국의 수입증가율이 작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6.7% 증가에 그쳐 1997년 상반기의 9% 증가에 못 미쳤다. 또한 1997년 이후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도 금융위기 국가들의 수출확대에 큰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악화되는 대외여건의 불리함을 이겨내고 수출증대를 금융위기 극복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내여건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 2. 품목별 및 지역별 수출동향

### (1) 품목별 수출동향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등은 총 수출의 41.9%(1997년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이며 동시에 일본과 수출경합관계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수출은 1998년 5~7월의 엔저 현상, 국내 금융경색 지속, 아시아시장의 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부진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총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1998년 9월부터 시작된 엔화의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은 10월부터 12월 사이 2.9% 증가했고, 선박과 자동차 수출 역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했으나, 전자제품이나 석유화학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는 데 그쳤다.

1998년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철강제품의 수출은 예외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총 수출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제품 수출이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호조를 보인 이유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는 철강업체들이 내수감소로 인한 과잉공급량을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로 대폭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특수강을 제외한 범용강의 경우 품질과 가격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호조를 보일 수 있었다. 1998년 10월 철강수출이 20.9%의 감소를 보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그 후 미국과 EU지역으로의 수출 호조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일차산품의 수출은 1998년 초 잠시 호전되었으나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어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이다. 총 수출대비 8.7%를 차지하고 있는 일차산품 수출이 5월 이후 부진했던 원인으로는 농·임산물 수출의 50% 이상을 점하는 일본시장의 경기침체 지속, 동남아 국가들과의 치열한 가격경쟁, 수산가공식품의 원료확보난 등을 들 수 있다.

총 수출에서 12.9%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수출은 1998년 들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국내업체들의 저가수출감행, 부도발생을 우려한 기업들이 자금확보 차원에서 단행한 덤핑수출, 원화환율 상승으로 인한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 홍콩, 중국 등 직물 최대 시장에 대한 수출 등이다. 섬유직물의 경우, 중국, 홍콩, 동남아국가의 수요 급감으로 총 섬유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미국이나 EU지역으로의 수출은 비교적 큰 감소가 아니었고 중남미 지역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섬유제품은 가격경쟁력 하락에도 불구하고, 직물제 의류를 중심으로한 선진국 지역으로의 수출호조로 증가세를 지속시켰다.

총 수출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수출은 금융위기 발생이후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칼라 TV 등 주요수출품목의 생산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디오 등 국내업체의 부도 등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해졌고, 가전제품수출의 1/3을 차지하던 동남아 및 동구·러시아지역의 수요감소로 수출이

급감(40% 감소)한 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 제품의 단가하락도 저조한 수출실적에 한 몫을 했다고 보여진다.

&lt;표 4&gt; 한국의 품목별 수출증가세

(단위: %)

품 목	97년	98년	98. 1/4	2/4	3/4	4/4
중화학제품	5.9	-1.7	7.4	1.2	-8.0	1.5
반도체	-2.3	-3.2	12.7	-12.8	-11.6	2.9
자동차	2.1	-7.6	0.2	-17.2	-6.1	3.2
철강제품	12.3	18.2	26.8	35.8	17.1	-7.4
석유화학	25.2	-2.6	14.8	3.6	-14.2	-11.4
일반기계	-2.1	0.2	1.3	17.7	-0.9	-13.1
경공업제품	0.6	-10.1	-7.0	-9.5	-8.4	-13.2
섬유직물	3.3	-16.4	-10.6	-15.0	-14.7	-26.6
섬유제품	-2.6	7.6	4.5	11.7	11.1	2.3

자료: 산업자원부 「수출입동향」 각호

총 수출대비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기계의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증감을 거듭하였다. 북미·유럽의 내수증가, 중동·서남아지역의 개발투자 수요 증가, 국내경기침체에 따른 중고기계(주로 수입 외국산 기계)의 수출 등은 일반기계의 수출증가를 촉진시킨 반면 선진국시장의 자본재 수입수요 감소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여건에서 일반기계의 수출은 1998년 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 수출대비 11.9%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수출은 1998년 4월부터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D-RAM 국제가격의 하락, 최대 수요시장인 미국과 EU지역에서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출부진, 아남전자의 생산량 감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자동차의 수출은 1998년 5월부터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수출금융조달상의 애로, 신모델 수출을 위한 해외 현지 재고조절, 동남아 지역의 경기침체, 기아자동차의 상대적 수출부진, 노사분규에 의한 조업중단, 부품업체의 대량 도산으로 인한 제품조립 차질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끝으로 선박수출은 1997년의 수주실적 호조 외에도, IMF체제 이후 금융경색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사들이 보유선박을 매각하고 선박을 리스하는 경향을 보여 금융위기 발생 이후 오히려 수출이 30%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8년 7월에는 건조량 감소로 -52.8%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 (2) 지역별 수출동향

우리 수출의 지역별 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와 크게 변화하였다. 1991년 우리 수출의 대선진권 비중은 62%로 대개도권 비중(38%)보다 훨씬 높았으나, 1995년을 기점으로 우리의 대개도권 수출이 대선진권 수출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97년에는 대개도권 수출비중(56%)이 대선진권 수출비중(44%)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고 성장을 지속한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19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지역별 수출은 대선진권비중이 확대(97년 44.1%; 98년 48.3%)되고 대개도권비중이 축소(97년 55.9%; 98년 51.7%)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제2위 수출대상국인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 수출이 급감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호황을 지속한 미국 및 EU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998년에 우리 수출이 호조를 보인 지역은 미국(전년동기대비 5.1% 증가), EU(7.9% 증가), 중남미(2.4% 증가), 중동지역(30.1% 증가)이다. 이는 동남아 금융위기에 따른 아시아시장의 위축, 원화의 평가절하에 의한 가격경쟁력 강화, 미국경제 호황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2/4분기(특히 5월 이후)부터 미국경제의 전망이 불확실해지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수입증가율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11월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 우리 기업의 신시장개척 노력, EU경기의 호조 및 이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lt;표 5&gt; 한국의 지역별 수출증가세

(단위: %)

지역	97년	98년	98. 1/4	2/4	3/4	4/4
선진국	4.8	6.3	26.0	1.9	-2.9	4.4
미국	-0.2	5.1	14.8	3.0	1.2	4.0
EU	10.0	7.9	22.0	2.5	7.5	3.5
일본	-6.3	-17.3	-15.5	-18.0	-25.4	-9.3
개도국	5.1	-10.1	-2.9	-6.3	-16.0	-14.6
아세안	0.0	-25.1	-31.5	-25.9	-28.0	-12.3
중국	19.3	-12.6	-2.2	-5.9	-19.2	-22.0
중동	-10.7	30.1	46.3	25.1	30.4	22.5
중남미	-3.3	2.4	14.1	5.6	-1.4	-6.8

자료: 산업자원부 「수출입동향」 각호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일본(전년동기대비 -17.3%), 중국(-12.6%) 및 홍콩(-14.1%), ASEAN(-25.1%)지역이다. 특히 대일본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본경기침체의 장기화에 의한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엔저현상에 따른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8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0.0% 감소하였으며, 중국무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대홍콩 수출도 14.1% 감소하였다. 이는 동남아국가 통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에 따라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 결과 중국의 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7월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 3. 수출부진 원인

산업연구원이 1998년 5월 실시한 수출업체 실사 조사결과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부진의 원인으로 교역상대국의 수요감소(31.6%)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쟁국과의 경쟁심화(29.7%), 수출단가 하락(23.2%), 수출입금융 애로(7.1%), 원자재 확보 곤란(5.2%), 통상마찰 및 수출입규제(1.3%) 등이 거론되었다.<sup>9)</sup>

이러한 원인들 중, 1997년 우리 수출의 50.3%를 점하였던 아시아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이 지역의 수요감소가 우리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ASEAN지역에 대한 공산품 수출은 1998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27.5%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8년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증가분 18.5억 달러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아시아 지역은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어서 대체로 높은 무역의존도를 지니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상호무역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금번 아시아 금융위기로 초래된 이 지역의 경기침체는 역내 국가들의 수출에 큰 타격을 가져다주었으며 앞으로 이 지역의 경기침체를 더욱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국가들의 수입증가율과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증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국의 수출감소율과 이들 국가의 수입감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의 수출감소가 주로 이들 지역의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우, 한국의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위축으로 인한 유발수출의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부진을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원인으로 경쟁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경쟁국들의 통화가치가 동반하락하고 이들 국가들도 침체된 내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촉진 전략을 전개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간의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9) 산업연구원(1998) 참조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수출상품의 단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인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단가는 1998년에도 지속되었다. 때문에 수출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표 3> 참조). 계속되는 수출단가 하락세의 원인은 경쟁국들과의 경쟁심화 외에 환율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출가격 인하 및 해외 바이어들의 수출단가 인하요구, 내수부진으로 인한 기업들의 밀어내기식 수출, 주요 수출품목의 지속되는 과잉공급, 그리고 한국 수출품목의 높은 가격경쟁의존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이 IMF 관리체제로 진입한 후 시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출입금융이 급감함으로써 수출업계의 금융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다.<sup>10)</sup> 특히 최근 퇴출은행을 인수한 시중은행들이 퇴출은행의 무역금융 업무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아 기존 퇴출은행과 거래관계를 맺은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IS는 수출환어음의 종류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 두고 있어 신용장이 있는 일람불 수출환어음(at-sight L/C)의 경우 신용기간이 불과 7~15일 정도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용기간이 긴(90~180일) 기한부 수출환어음(Usance)의 경우 담보나 신용보증서가 없으면 대부분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수출입금융 이용에 여신한도가 적용되고 있음으로 기업들은 여신한도 부족으로 수출입금융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sup>11)</sup>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연불수출 방식을 통한 수출은 선적후 대금결제의 장기화로 수출기업에 상당기간동안 자금압박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금거래방식의 경우에도 바이어측의 지나친 단가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기업의 자금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관련 금융애로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기업의 하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담보부족과 높은 신용위험으로 무역금융을 지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신용장(L/C)을 수취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무역금융전액에 대한 보증이 없을 경우 무역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IMF 관리체제하에서는 설비증설시 기계를 담보로 설정해 주지 않고 부동산 담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설비투자가 활발한 기업들은 운전자금의 부족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용보증기관이나 은행에서는 L/C 기준이 아닌 전년도의 실적기준으로 무역금융 및 신용보증 한도를 정하므로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수출 기업들의 애로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하겠다.

금융위기 직후 금융경색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금융의 마비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극심한 걸림돌이 되었던 원자재 확보난은 원자재 수입금융지원, 조달청 원자재 비축자금 확대,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 총 80억 달러 지원규모의 적극적인 문제해소 노력에 힘입어 이제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 원자재 확보난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10) 수출기업들의 금융상 애로사항은 산업연구원 자료(1998)를 많이 참조하였다.

11) 기존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하락으로 무역금융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부대비용과 물류비용이 과다한 점도 우리 기업의 수출부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환어음의 매입시 부담하는 환가료는 그 동안 많이 낮아졌으나 아직도 Libor + 1% 수준인 경쟁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한국의 환가료는 98년 10월: Libor + 3.0~5.0%). 또한 외환매매수수료율도 외환위기전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의 외환매매수수료율은 98년 10월  $\pm$  1.0~2.0%). 미주 등 장거리 수출의 경우 수출선적비, 해상운임, 보험비용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고 컨테이너의 수급불균형도 물류비용 증대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끝으로 해외시장 동향 및 바이어 정보 등 무역정보관련 인프라 부족과 여전히 까다로운 수출입관련 절차 및 행정의 수출부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IV. 수출지원정책방향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최근 수출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상 아직도 수출이 국민경제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정부와 업계가 다같이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기업의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은 단기적으로는 해외시장으로의 수출확대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확대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간에 다소 시각차이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다. 특히 대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12)</sup>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쉽지 않은 과제이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수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나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우리 경제가 어려울수록 WTO와 OECD 등 국제기구가 정한 국제규범과 합치하는 수출지원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우리 경제정책의 대외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지원정책이 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국제경쟁력 기준에 의한 수출이 증대되기보다는 수출지원을 최대한 따내기 위한 경쟁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더 나아가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외화획득의 단기적인 이득보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무역상대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다주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수출지원정책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기본방향은 후

12) 산업자원부 원자재 재고 조사(1998)결과

13) 한국경제연구원(1998)은 대기업과 종합상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자 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무역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무역관련 국제규범은 직접적인 수출지원은 물론 특정성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공적 수출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수단도 수출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이 위주가 되어야 하며 과거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시기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 1. 정부의 수출촉진방안

위에서 본 수출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수출촉진대책은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자력으로 수출신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출확대의 관건이 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마련도 수출촉진방안의 하나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몇 가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수출촉진방안을 살펴본다.

### (1) 수출입금융의 원활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수출업체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은 수출입금융 경색의 문제이다. 현재의 수출입금융 경색은 외환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외화자금 부족과 구조조정을 앞둔 금융기관의 소극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자금운용에 기인하는 만큼 근원적인 해결책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금융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수출입금융경색의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과정에서 수출입거래에 소요되는 단기 유동성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과 수출입금융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와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출입금융을 원활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안은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8%(BIS 기준) 이하로 하락된 부분만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늘여 이를 보전해 주고 이자율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기업부도율을 낮추는 것이라 하겠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원활한 수출입금융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와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출입금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담보력이 약한 수출기업은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 보증을 필요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따라서 정부는 신용보증사용 추이를 감안하면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조치 등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신용보증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추가출연이나 공적자금을 활용한 특별신용보증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이 대외변제금 증가를 이유로 보증서 발급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증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입금융 이용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신규 무역업체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역업체의 수출입금융의 경우에는 보증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대보증과 백지 약속어음을 요구하는 수출보험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구매승인서를 가진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며, 보증력이 취약한 신규무역업체에 대해서는 L/C를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sup>15)</sup>

수출입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외국계금융기관의 수출입금융업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sup>16)</sup> 공급기관을 늘임으로써 수출입금융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시중은행의 환가료, 외환매매수수료 등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경쟁도입을 통한 수출입금융관련 수수료 인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제고시켜 줄 것이다.<sup>17)</sup>

수출입금융의 원활화 방안으로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확대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 제도에 의한 무역금융 용자는 엄밀히 따지면 일종의 정책금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된 근본 취지는 담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총액대출한도의 제한된 규모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듯이 담보와 보증관련 제도와 요건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수출입금융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규모의 확대보다는 기존의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요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액대출한도 규모만 늘린다면 정책금융의 폐단인 자원배분의 왜곡과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제무역규범과 관련된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14) 금융기관들이 무역금융관련 대출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첨부할 경우 대출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10%로 낮아지는 반면, 보증이 없으면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최고 100%의 위험가중치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보증 신용장 대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15) 한국경제연구원(1998) 참조

16) 산업연구원(1998) 참조

17) 지난 8월 19일 시도된 정부의 무역어음 할인 활성화 및 신용보증 확대 조치는 BIS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은행에 1조원의 재원을 투입시키고 무역어음을 연리 13~15%로 할인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높은 인수수수료(0.5~1.5%)와 보증료(0.4%)로 인해 실제 어음할인 금리가 시장세금리보다 높아 현실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다.

이와 연관된 사안으로 최근 대기업과 종합상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허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전환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원과 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 무역금융제도의 취지인 중소기업의 수출입금융지원을 위해 30대 대기업의 계열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Local L/C 자금을 결제할 경우 무역금융을 허용하고 이를 여신한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끝으로 수출보험기금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출보험에 가입된 수출상품에 대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은 위험가중치가 매우 낮아 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데 큰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보험금의 확충은 소규모 자금으로도 획기적인 수출 촉진을 가능케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보험공사의 담보능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며 수출기업의 이용률도 현저히 낮다. 따라서 수출보험기금의 확충과 수출보험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는 앞으로 수출촉진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수출은 수출보험 부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위험지역 수출에 대한 보험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 기타 간접적 수출지원방안

정부는 금융상의 애로를 완화하는 것 외에도 원자재 조달애로 해소, 기업들의 수출질서 유도, 내수진작을 통한 수출기업의 기반 확충 도모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원자재 구입난 해소를 위해서는 자금지원 강화를 비롯해서 정부 비축물자 제공, 원자재에 대한 관세 추가인하, 국제기구와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원자재수입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완화,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요건 완화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물량은 월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은 2.2% 감소하였다. 비록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과 기초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라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한국의 단가 하락률이 경쟁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해외 바이어의 교란이 심각하다는 것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애로사항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무역협회, KOTRA, 산업별 협회 등 무역관련 기관의 조정기능을 활성화시켜 수출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내수침체로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게 되면 결국 건전한 수출기업에도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게 되어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쇄적인 기업부도를 막고 경제 전반의 생산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는 내

18) 산업연구원(1998) 참조

수진작을 중심으로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하겠다.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기업의 수출촉진 여건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수출입요건 확인품목의 대폭 축소와 전산화, 화물터미널 처리비, 해상 및 항공화물운임의 인하, 육상운송료, 영업용보세장치장 보관료 요율합리화, 관세사 수수료 체계 합리화, 화물경비로 요율 합리화 등을 통한 수출입 물류경비의 절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마케팅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낮으므로 이들 기업의 효과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국내 상설전시장의 확대와 해외전시회 참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실무 및 해외마케팅을 일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3) 국제경쟁력 강화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축소된 설비나 R&D투자는 경제회복 이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1998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43.5%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폭이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 둔화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면의 경영난을 이유로 R&D투자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한다해도 기업간 또는 산업간 네트워크의 소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소멸 및 투자축소로 빚어지는 성장잠재력하락을 회복하는 데에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sup>19)</sup> 따라서, 정부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유지 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R&D, 환경보호, 지역개발 보조금제도를 활용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주요 지역별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과 주요 지역 또는 국가와의 투자 및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기업의 역할

기본적으로 수출촉진은 기업의 몫이다. 최근 외환위기로 내수가 침체되고 있어 우리 기업 대부분의 전략이 수출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 침체는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수출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수출과 관련되어 제반 특혜가 부여되어 어느 의미에서는 특혜를 최대화하기 위해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더 나아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출을 통해 기업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9) 구본관(1998) 참조

따라서 기업은 세계경제환경변화를 직시하고 정부가 조성하는 새로운 수출여건 하에서 수출경쟁력과 수출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신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 및 신뢰구축, 건전한 재무구조 보유, 신제품 및 아이디어 개발, 미래지향적인 R&D 투자, 하청업체와의 건전한 협력관계 유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유지, 해외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구축, 경영혁신 추진 등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외환위기가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하며 특히 수출확대를 위하여 기업 나름대로의 지역별 수출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들은 공동 브랜드를 활용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방안과 해외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정보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전시판매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중소기업은 생산을, 대기업은 판매와 판매후 서비스(A/S)를 담당하는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여파를 감안하여 기업들은 이 지역 국가들과의 구상무역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해당국 정부간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구상무역 추진 상대국가와 민관 합동으로 구상무역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본관. 1998. 『산업현장의 위기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 김삼겸·노상욱. 1998. 「수출지원방안: 국제적 사례와 우리의 전략」,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중년·유용주. 1998.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최근 수출부진의 원인과 향후 수출여건 전망』.
- 매일경제신문사. 1997. Booz, Allen & Hamilton사의 『한국보고서』.
- 산업연구원. 1998. 『수출활성화 대책』, 정책자문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각호.
- 산업자원부·한국무역협회. 1998. 『IMF위기극복을 위한 수출입 지원제도 안내』.
- 정인교. 1998. 「동아시아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우리나라 수출정책과제」,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1998. 『최근 경제현황과 대책』, 정책토론회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1998a.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 \_\_\_\_\_ . 1998b. 『KDI 경제전망』.
- 한국무역협회. 1998a.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무역협회. 1998b. 『우리수출의 국제경쟁력 현황』.

\_\_\_\_\_. 1998c. 『IMF이후 수출호조기업의 특징과 성공요인』.

Ahn, Choong Yong, Joo-Hoon Kim. 1997. "The Outward-Looking Trade Policy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e Korean Economy 1945-1995*. KDI Press.

McKinsey Global Institute. 1998. *Productivity-led Growth for Korea*.

OECD. 1998. *1997-1998 Annual Review: Korea*.

## EXPORT POLICY DIRECTIONS FOR POST-FINANCIAL CRISIS ERA

Taeho Bark

*Gradua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November 1997 when the financial crisis erupted in Korea, the government has recognized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xport enhancement as one of the most basic solution to the current economic turmoil. However, in 1998 exports recorded a 2.2% decline due mainly to the decreased world demand caused by the economic turmoil in Asia. The analysis of this disappointing export performance reveals various limitations of Korea's export structure especially in terms of its concentrated product mix and overall low competitiveness.

The export-l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dopted by Korea since the 1960s wa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clos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Powerful and interventionist government led the economy to grow at accelerated pace through various industrial policy measures. Businesses, in turn, failed to acquire the needed competitiveness. As a result, despite the remarkable growth of Korean export over the years, it has also become un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In formulating trade policy, the government must break away from the past practices and adopt a drastically different position. Beginning with the elimination all regulatory barriers that are preventing Korea's competitive products to be exported abroad, the polic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create an environment

---

under which domestic industries can develop into world-class manufacturers. The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must make an effort to identify changing world market environment and work to enhance their genuine competitiveness.